

“딱 그 시기에...윤석열 부친집 괴이한 거래”

민주, 대장동 의혹·부동산 맹공 “장모 변호 문건 보도 검찰 사유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사건 변호를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이 추가로 있다는 언론의 폭로를 고리로 '검찰 사유화 논란'을 재점화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 조직을 장모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 만들어 변론 요지를 만들었다"며 "이런 권력 사유화, 남용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안은 사실 탄핵소추의 사유였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도 남한데 손해 끼친 적이 없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변론 준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맹공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번에 보도된 변호문건은 성남 도천동 부동산 사건 관련"이라며 "이 사건은 장모 최씨가 개발사업에 관여하면서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50억 원을 챙긴, 일명 '50억 게임'의 원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집안 문제 해결 흥신소였고, 밖으로는 검찰 총선개입 공작의 비밀기지였다"라고도 꼬집었다.

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대검을 검찰총장 가족을 변호하는 사조직처럼 부리고도 그 수하인 손준성 검사를 추미애 사단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쓰아붙였다.

여권은 대장동 의혹에 윤 전 총장이 등장하자 이와 관련해서도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은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며 "그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대장동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인 동시에 윤석열 게이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은 이 괴이한 거래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 의혹을 탈당한 과상도 의원을 향한 비판 공세도 계속했다. 특히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중대 재해에 따른 위로금 차원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화천대유의 산업재해와 일반 국민의 산재가 이렇게 다른 세상이라니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며 "산재물 뇌물을 정당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산재로 고통받은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지역 대선 공약 제안...광주시장 출마 채비

중입자 가속기 도입·메디컬시티 등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대선 공약을 제안하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강 전 수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지역 발전 방안을 담은 '호남의 미래를 여는 7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중입자 가속기 도입과 메디컬시티 ▲22세기형 가상현실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디즈니랜드 추진 ▲인공태양과 그린수소 중심의 미래에너지 인재 양성 ▲데이터비즈니스 거점이 될 아시아 데이터터미널과 국가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3대 환경산업 기후대기클러스터 ▲대한민국 4대 관문 공항과 1000만평 공화도시 ▲호남권 수소광역급행망 등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광주-전남·전북을 500만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호남은 인구가 적고,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로 큰 꿈조차 갖지 못했다"면서 "꿈을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닌 꿈꾸는 도시, 꿈이 실현되는 꿈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7대 공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앞서 전남 '더류브 4차 온라인 상생포럼'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광주-전남 교수·연구원 210명으로 '더류브 상생포럼'을 조직하고 내년 선거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언론법 다시 순연 국회특위서 추가 논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시 순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국감 브리핑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 연평균 41건 발생

김희재 국회의원

고속도로 적재물 적재물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이 2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만2440건으로 연평균 7만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도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김희재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에 따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낙하물에 따른 사고 발생의 경우 소송으로 책임소재를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안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주력산업 소프트웨어·화학 인력난 심각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지역의 주력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 화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집계된 2019년 말 기준, 12대 주력산업 중 산업기술인력 현원 대비 부족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소프트웨어 4%로 나타났고, 이어 화학 3.3%, 바이오헬스 3.2% 순이었다. 이 산업들은 타 산업 부문보다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충원률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률은 비수도권이 11.6%로 수도권 9%보다 2.6% 높았다. 전남은 24.6%로 전국에서 미충원률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일자리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인프라 등으로 인한 구직자들의 외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대 주력산업 중 바이오헬스 부문은 5년 연속 인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성장과 고용 창출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2019년 전년대비 비산업기술인력 증가율이 3.1%로 12대 주력산업 중 가장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 "인력 부족률이 높은 산업 분야에 대해선 보다 특별한 관심과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용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재직자 훈련,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확대 등을 통해 인재양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 공무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매년 늘어

윤재갑 국회의원

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안도진도)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총 117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9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19년 96건, 2020년 117건, 2021년 8월 기준 83건을 기록 중이며 이정도 속도라면 올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폭이 다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속도위반 101건 ▲신호위반 8건 ▲주정차위반 7건 ▲구간속도위반 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경장과 경사 계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하기에 속도위반이 자주 있을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나 많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해양경찰이지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다른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라며 "바다 위 국민뿐만 아니라 도로 위 국민까지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도로교통법 속지의 안전운전 교육에 더욱 신경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천만원, 중개환영 010-6837-4700